

# 이주여성X돌봄노동-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간담회 기록문

2023.07.08.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 기록

자료집: **0708\_이주여성x돌봄노동\_간담회\_자료집pdf.pdf**

---

## 정책간담회 순서

1. 인사나누기	2
2. 들어가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	2
- 문수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	
3.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3
- 김혜정 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4.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 정책	6
- 오현화 정치하는 엄마들	
5. 참석자 자기소개	8
6. 질의응답 및 토론	
a. 발제자 상호질의	9
b. 질의응답	9
c. 마무리 발언	12

---

## 1. 인사나누기

평등문화약속문 읽기,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함.

## 2. 들어가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 | 문수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

7월 5일, 이주노동자의 지역 이동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개편안이 발표됨. 녹색당도 이에 대응하여 논평을 발행함. 제한 목적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고 했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을 것.

작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획득함. 최저임금 보장,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미등록 체류상태인 가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음.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 직고용이 필요함. 서울시의 가사도우미 정책은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겠다는 의미.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상태인 가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분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고 하며 폭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이주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따르면 이주여성, 이주민에게 성폭력을 당해도 그냥 지역에서 살라는 폭력적인 이야기로 들림.

구글 트렌드에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출산율이 많이 언급되었던 기간은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임.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점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

시대전환 조정훈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저출산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나와있고,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혀있음.

합계출산율은 아직 이슈. 정책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출생이야기를 많이 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여성과 남성들의 소개팅을 서울시가 직접 주선하는 서울팅이라는 정책 존재. 하지만 많은 비판 받음. 서울팅과 비슷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정책도 존재.(성남시 정책)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도입해 7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다며 낮은 비용을 언급. 이는 더 적은 비용으로 고용해도 된다는 시그널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다각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 도우미의 월급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함. 100명 규모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함.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음.

### 3.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 김혜정 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이주가사노동자 법안 등장 배경,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내용

조정훈 의원의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말자는 것이 핵심.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고용이 38-76만원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했음. 하지만, 고용자는 급여 외의 고용부담금, 생활비 등 다른 비용도 내야하기 때문에 38-76만원으로 가능하지 않음.

지난달 고용노동부 공개토론회에서 다른 부분을 보면,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봤을 때, 내용이 없는 게 내용.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경력 및 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애매모호한 내용.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내용들을 봤을 때 입주제는 아니고 출퇴근하며 노동을 함. 고용인원 인원 100명. 고용형태는 미정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음. 최저임금으로 노동착취가 가능한 이주여성 도입하는 것임. 현재 가사도우미의 노동 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새로운 착취의 모습을 만들고 있음.

-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2017년에 실시한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안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근로 시간이 16시간이 62% 차지, 24시간 답변도 존재. 휴일의 경우 일주일 하루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음. 아침에 나와 저녁 당일 귀가하는 것으로 휴일을 대체. 급여의 경우 2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이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

빨리빨리 하라며 재촉 폭언을 많이 들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함. 일주일 2-3번 방문해 일하는 한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도 현실이 좋지 않음. 일주일치 노동을 다 몰아서 하는 경우 있음. 또한, 가사노동의 경우 업무의 범위 산정 힘듦. 경계없이 업무 진행.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한국의 제도,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데 더 노동환경이 안 좋아질 것.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계약서를 지켜야할 것 같아 근로계약서가 제약으로 작동해 근로계약서를 안씀. 이주가사노동자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게 체류 불안으로 되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체류상태와 직결되는 것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 됨.

작년 6/16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함. 가사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법임. 이주노동체류자격으로 왔다가 체류자격변경이 어려움. 노동자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안전 장치가 없음. E-9(비전문취업)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열악함.

#### ●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체류권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방문취업(H-2)의 경우 취업개시신고. 별도 신고가 필요없는 비자가 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는 확인 어려움.

사업장 변경 사유는 노동자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변경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변경이 어려움. 사유는 1)사용자의 사유 2)휴업 폐업 정도가 있음. 이는 사용자의 입장만 고려한 것임. 이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보여줌. 예를 들어 이주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대부분 입증할 방법이 없음. 한국의 문화, 물정을 모르고 성폭력, 성추행에 노출되는 경우 많음.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 심각.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간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재고용의 경우, 1년 10개월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 변경 제약으로 인해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제는 지역이동까지 제한한다는 것. 체류도 제약하고, 사업장 변경 제약하고, 지역이동도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젠더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보고회에서 나온 판결들을 보자면, 장소 및 관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사업자에 의한 성폭력,사업장 변경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열위,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 (다시 일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잘 보여야하기에 공론화하기 어려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피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는 위계가 만드는 성희롱, 성추행임. 체류자격기간이 끝나면 또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야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움.

미국은 미등록 체류 여성이 학대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미등록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자격을 줌. 개인을 구제하는 것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영주체류자격을 줌.

공익인권법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농업노동자는 10%임.

이주여성상담소 상담통계(2021)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건은 1300여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2022) 통계에 따르면 522건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2022)에 따르면 870정도임.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젠더폭력 취약, 제도개선은 미약한 상황임. 2017년에 회사 동료 남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알고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여성을 살해한 사건있었음. 미등록이라는 상황 자체가 여성의 선택지를 없게 만든 것.

이주여성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고, 돌봄노동 가치절하하고, 국민여성의 돌봄노동에서 이주여성의 돌봄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종차별임. 이주여성을 돌봄 기계로 취급. 쓰고 버릴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

● 녹색당에게 바라는 정책-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는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 해야함.

한국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 싱가포르 가입X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연한 국제 조약인데 가입하지 않음.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은 오늘 하루 이틀만에 도입된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협약임. 이주가사노동자시범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가사노동자 협약)에 맞춰야한다고 주장 필요.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여성의 노동환경을 취약하게 만들뿐아니라, 이주여성의 착취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4.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 정책 | 오현화 정치하는 엄마들

- 전제가 틀렸다; 돌봄이 여성과 청년에게만 집중되어서 출생률(출산율)이 떨어지는가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을 기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돌봄의 부재라고 볼 수 없음. 저출산 원인은 고물가, 1인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임.

돌봄의 부재는 아님.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음. 요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0원임. 과거에는 개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없음. 조금 더  
보육을 양육자의 시간에 맞출 수 있음(어린이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 가능)  
하지만 노동시간이 길고, 제도 밖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해 애를 써야함. 지금처럼 노동에  
돌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노동을 맞추는 역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함.

- 이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없었는가

서구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개발국  
여성들이 돌봄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 나타남. 한국의 경우도  
비슷함.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조선족 이모’임. 양육자의 입장에서 조선족  
이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일하는 엄마의 조선족 이모 고용경험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이모의 생활방식과 관련해  
엄마들은 장시간의 TV시청, 잦은 전화통화, 다른 집과 비교하기,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은  
문제로 삼았음. 육아와 관련해서는 엄마보다 조선족이모를 더 잘 따르는 현상(조선족  
이모와의 애착), 조선족이모의 아동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등을 문제로 꼽았고 이 문제들이  
일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는 조선족 이모의  
위생관념 부족,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꼽았음.

그런데, 조선족 이모 대신 시어머니, 남편을 넣어도 똑같음.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태도,  
엄마보다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현상 등등..조선족 이모 대신 남편을 넣어도 똑같음.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누구와도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조선족 이모의 문제보다 사적인  
돌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맘에 들지 않으면 간편하게 해고 할 수 있기에 조선족 이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공공이  
관리나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의문.

- 주먹구구 ‘외국인 수입’ 정책에 대한 피로와 분노

‘외국인 수입’은 처음이 아님.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입. 남성과 결혼할 여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외국인 여성을 수입. 국가는 이런 행태에 동의하고, 이들의 인권유린을 방기함. 개인이 견디고, 알아서 해결하고, 피해도 셸프로 구제.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음. 이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데 외국인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임. 최소한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음.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 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400명이 법의 적용을 받음. (10만명 중 400명) 10만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어불성설임.

-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다시 민간영역으로

기혼여성의 노동력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 폭증. 돌봄 수요가 필요하니까 신고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후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미임.

- ‘누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평균적인’ 양육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어려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200만원, 100만원을 주고 고용할 것.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즉, 한정된 사람들이 고용할 것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원임.

무상보육이 제공됨에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음. 무상보육+아이돌보미 사업+초등학교 돌봄교실까지 운영 중. 이는 소수를 위한 정책임.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질문해봐야 함.

- 돌봄의 시간은 당신의 생각보다 길다

국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종사자 자격과 복지 책임지고 양육자 자기부담비용 일부를 부조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이상의 정책을 준비했다고 가정하면 돌봄의 공백이 메워지고 양육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돌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시기의 돌봄의 공백 있음. 초등 3학년 이후로는 돌봄 교실에 가지 않음. 학원이 돌봄을 해결하고 있음.(태권도 학원) 양육자들이 염려하는 돌봄의 공백은 1-2년이 아님. 긴 세월의 돌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돌봄정책은 보다 폭넓은 연령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영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사회서비스원 사람들을 잘랐음. 공공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위탁 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

알아서 100만원, 200만원 낼 수 있는 사람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의 보육정책이 필요한 것 같음. 공공에서 책임질 것이 많으니까, ‘골치아파’라는 식으로 안되면 새로 또 접는 그런 정책은 안됨.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음.

## 5. 참석자 자기소개

이주민 법률지원센터 모모 김원규 변호사(녹색당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함. 인권과 차별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됨. 이주여성, 가사노동 관련해서 어떤식으로든 녹색당에서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음.

이준태(녹색당 정책팀장): 잘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음. 들어보니 한국 사회에서 모순이 겹겹히 집약되어있는 이슈 같았음.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노동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더 차별적이게 될 것. 젠더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모순이 집약.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할 것.

이치선(녹색당 정책위원장): 작년에 열린 정책위 폭염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있는 폭염문제를 들었음. 42도 온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열악한 곳에서 주거하는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주민 관련 정책에 관심 생김. 대선에서 이주민 공격을 봤음. “자국민 일자리 빼앗은 불법외국인 고용권장,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현재의 정치는 극우 정치-혐오의 정치로 더 심하게 가고 있음. 희생양은 이주민이 될 것 같음. 진보정당에서 이주여성, 이주민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당의 정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토론회 들으면서 많이 배웠음.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야할 것 같음. 관련해서 헌법 소송을 내봐도 좋을 것 같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반하는 이야기(거주이전의 자유)

이상윤(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담당): 이주노동 중에서도 가사노동, 어업, 농업 사각지대에 있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고자 참석.

영교(녹색당 경기도당): 거주 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문이 위치성. 위치성과 잘 연결되는 문제 같아서 참여.



은설(서울녹색당 사무처장): 여러문제들을 접하며 당 내의 이주민tf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 것을 어떻게 당안에서 시작해볼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음. 이렇게 좋은 자리 참석 할 수 있어 감사.

## 6. 질의응답 및 토론

### 1) 발제자 상호질의

김혜정님: 이주노동 환경은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취약해짐. 결혼이주자도 국적을 취득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음.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음.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토론회에 가서도 고용노동부는 ‘검토하겠다’, ‘논의해보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함. 줄속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인권 침해 사업이라는 목소리를 내야함. 지난 대선에서도 이주민 관련 정책은 없었음. 다문화 배경 자녀를 위한 정책 정도 밖에 없음. 당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현장에서 힘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음.

오현화님: 이주민 정책이 왜 안나올까 고민해보면 투표권이 없기 때문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가 밀림. 이게 선주민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같이 말해야함. 공적인 돌봄을 이용하면 대체돌봄인력도 있음. 하지만 사적으로 고용하면 대체돌봄인력이 없음. 개인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 독일의 경우, 이주민들을 잘 정착시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국민’으로 키우는 게 목표임. 이게 좋은 이주 정책이라고 생각함. 보편출산제와 비밀출산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슈임. 보편출산제 반발이 많았던 이유는 ‘불법’인 사람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 때문임. 보편출산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 되어야 함. 모든 사람들이 국가안에서 안정적으로 출산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개인의 안녕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안녕의 문제로 잘 풀어가야함.

### 2) 질의응답

Q: 이주여성 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어떻게 되나?

A: 이주노동자분들은 기숙사 이용. 지역에 따라 공공기숙사 마련하는 경우 있음.

계절노동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집(가족이나 친척)에서 거주. 혹은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주거 공간이 아닌 건물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경우 있음. 영상들도 찾아 볼 수도 있음. 대부분

가숙사에서 거주하는데 20-30만원 비용을 임금에서 제외.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

**Q:** 입주 가사노동자의 경우에도 숙식비가 제공되는가?

**A:** 주로 남은 음식을 먹거나 가족들이 남긴 음식을 먹음. 열악한 음식. 해외의 경우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주거 공간을 줘야함. 한국의 경우 복도나 선반이 주거 공간. 휴식의 경우 아이방에서 휴식. 이건 휴식이 아님.

그래서 선주민 노동자(한국)은 출퇴근 선호함. 이주민은 출퇴근의 경우 고용안정이 되지 않기에 입주식으로 진행. 200만원의 월급으로 계약을 해도, 200만원은 마지막 한달 정도에만 받음. 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 여성노동자의 경우 몸은 거기에 있으니까 노동을 하는 게 맞는데,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며 임금 지급을 안하는 것. 일주일 풀타임으로 계약하지도 않음.

**Q:** 가사근로 범위가 구분되어있는지?

한국은 잘 구분되어있지 않음. 선주민들은 노동조건을 확인하는데 소위 조선족 이모(H-2)는 노동 범주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거절하기 힘든 상황. 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받기도 함. 육아라는 범위를 어느정도 산정할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ex. 빨래 중 아이의 빨래를 골라 아이의 빨래만 한다고 할 수 있나) 해외처럼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함.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업무 외의 일을 강요받는 문제 있음. 선주민의 경우 한국말이 되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절이 어려움. “온 김에 이것도 해달라~”라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됨 딱 구분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 존재.

**Q:** E-9(결혼이민), H-2(방문취업) 등 비자제도가 분리되어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F-4(재외 동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해당되는 고용허가제의 차이가 있음. 특례고용허가제와 일반고용허가제가 있음. 특례고용허가제는 동포, 한국의 혈연 등을 정해 기준 다르게 하는 것이고, 동포가 아닌 이주민이 일반고용허가제에 해당됨. F-4(재외 동포) 관련 절차가 있음. 체류방식도 다른 비자와 다르고, 사업자 변경도 다름. F-4 인정을 위해서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함. 한국말을 못해도 동포라고 하면 비자 발급 됨.

김원규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배경으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출생을 개선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민이 됨. 정책 도입에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음. 최저임금제도의 예외를 만들어두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의도가 보임. 가사노동자에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걸

아까워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임.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있어보임. 시행령을 바꾸고, 지침 바꾸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꿔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음.

오현화님: 가사도우미 말고, 요양보호사를 먼저 건드릴 것 같았음. 다만 투표권이 있고, 선주민이기에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음.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이후에 노인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 같다고 생각함.

이치선님: 외국인 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아서 소송 제기.(2010년) 최저임금에 맞게 차액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림. 판결에서 미뤘을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큼. 이 문제를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이면 좋을 것 같음.

김원규님: 민주당, 정의당에서도 이걸 말이 안된다고 함.

이치선님: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에서 “자국민 일자리 빼앗은 불법외국인 고용권장,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라는 현수막을 걸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이야기함. 현 정책이 이주민 여성과 선주민 여성을 싸움 붙이는 것 같음.

김기성님: 파이싸움을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같음.

김원규님: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가 인권 문제와 연결되지만 내국인 외국인의 이해관계 대립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 있음. 녹색당에서 접근할 때도 정교하게 접근해야함.

김혜정님: 저출생, 경력단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도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함. 가사노동자 더욱더 고령화되고 있음. 고령인구가 가사노동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가사근로자의 고령화와 유입인구가 적은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됨.

오현화님: 직접고용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한 고용이 될 것.

김혜정님: 인증받은 기관들이 조금 생기지만, 공공성을 잃은 브로커를 통한 고용임. 가사노동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고용이 어려울 수 있음. MOU를 맺은 국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측이 어려움.

### 3) 마무리 발언

김기성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불평등한 세계구조가 잘 반영된 정책 같음. (여성이 담당해온 돌봄을 또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것) 돌봄이 어렵다면 남성이나 사회가 나눠야하는데.. 임금 노동(nine to six)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음. 돌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

미어캣님: 정책을 볼 때 개인을 도구화하는 문제가 잘 보임. 이게 너무 착취적. 이주민들이 국에서 정착해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저출생을 해결하는 길인데 이것 또한 싫어하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문제임.

김원규님: 이주민, 이주노동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세력은 없음. 진보 세력에서도 이주관련해서 잘 이야기를 안하는 것 같음.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음. 이주민과 내국인 노동자의 대립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음. 노조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한 것 같음. 이런 점에서 녹색당이 역할 해줬으면 좋겠음. 이주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 뿐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 관련 정책도 거의 없음. 녹색당이 잘 대응해주면 좋겠음.

이준태님: 오세훈 시장 이후, 후퇴하는 상황이 많이 보임. 그런데 후퇴하는 상황을 잘 봤을 때, 정책화가 아닌 문제를 띄우는 목표정도로 보임.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 하며 투쟁의 선을 만들고, 실질적인 선을 긋고 밀러는 움직임 같음. 이주여성,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장기적으로 많이 나올 문제 같음.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 같음. 정책 필요성을 환기하는 자리에서 많이 배운 것 같음. 전국사무처 차원에서도 노력 하겠음.

이치선님: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함.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됨. 최저임금의 보장이 되어야하는데 제외하는 문제도 심각함. '열등의 인종' 이라고 보는 점이 정책배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음. 이는 심각한 문제. 혐오의 정치, 극우의 정치라고 생각.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 이주여성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지위도 동시에 동반 하락 할 것. 극우정치와 혐오정치로 휩쓸려지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임. 당의 정책을 잘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잘 힘을 모아나가면 좋을 것 같음.

이상윤님: 이주노동 정책이 없는 이유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 진보정당임에도 혐오발언을 하는 곳이 있는데.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음.

영교님: 좋은 자리. 당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처음 왔음. 현안과 관련된 당의 정책이나 당의 중요 정책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음. 일반 당원의 경우, 당의 정책이나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들을 기회가 없음. 일반 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

은설님: 세계녹색당총회에서 다른 나라의 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는 왜 외국인이 거의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음. 이게 설명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 한국 녹색당이 이주민 정책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성찰할 필요. 변하는 사회상에 비해서 우리의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음.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들어서 이주민 2-3세대, 외국인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경기도 외곽의 지역이면 이주민 청소년들이 훨씬 많을 것. 이런 것이 이번 간담회와 연결 되는 것 같음. 이주민, 이주여성 돌봄 노동 정책들을 서울녹색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

오현화님: 여러 이슈들을 관통하는 문제를 넓게 봐야함. 딱 보이는 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점을 알아야 함. 가려져있는 빙산의 거대한 부분을 봐야함.

김혜정님: 미등록 이주민 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국남성의 아이면(DNA 검사로 판단) 본국에 출생신고하고 국적 취득 가능. 남성이 감옥에 가든, 방임인지 상관없음. 그렇게 되면 미등록 여성도 비자 확보할 수 있음. 외국인 남성, 여성의 아이인 경우 방법없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돌봄 노동이 평하되는 것이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점 연결. 당과 현장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함. 당에서 관심가지고 있어 큰 힘이 됨.

문수영님: 가사노동 관련 정책이라고 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가부장제에 기반한 정책이고, 20-30대의 결혼적령기 남성을 위한 정책같음. 이주민 당사자분이 와서 우리당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활동했으면 좋겠음. 녹색당이 이주민 친화적인 당이 되었으면 좋겠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찾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함.

김서연님: 서울시 외국인가사도우미 사업은 돌봄노동을 똑같이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 같음. 이주-여성-돌봄-노동-계급 등 등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간담회가 첫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음. 앞으로 당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정책위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보겠음.

김서린님: 이주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서울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해보겠음. 앞으로 다른 것들을 모색할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음.